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19. 6. 10.(월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김복환, 사무관 문영훈, 주무관 김재현 · ☎ (044) 201 - 3402, 3407	
	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	담 당 자	· 과장 박문재, 팀장 이계문, 주무관 오지현 · ☎ (02) 2133 - 4669, 4672	
	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	담 당 자	· 과장 민영경, 팀장 지대환, 주무관 손은진 · ☎ (032) 440 - 4541, 4543	
	경기도 토지정보과	담 당 자	· 과장 권경현, 팀장 김용재, 주무관 김석정 · ☎ (031) 8008 - 4971, 4965	
보 도 일 시		2019년 6월 1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정부 - 지자체 맞손,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

- ◆ 국토부-지자체 맞손, 11일부터 국토부·지자체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
- ◆ 국토부, 실거래 데이터 총괄·취합 → 각 지자체에 API 방식으로 제공
- ◆ [기대효과] 연간 2천만 이용자에 혼선 없는 실거래 공개정보 활용
민간 산업영역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서울특별시(시장 박원순),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, 경기도(지사 이재명)는 6월 11일(화)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하여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.
-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.

□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,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가 시·군·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하여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(API 방식)하도록 개선하여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'계약일'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'계약일'과 '부동산 거래 신고일' 사이에는 최대 '60일'의 시차가 발생

□ 또한,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(계약일 명시)로 변경하여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○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를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.

□ 개선된 정보는 6월 11일(화)부터 적용되어 국토부,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.

*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: <http://rt.molit.go.kr/>
*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: <http://land.seoul.go.kr/>
* 인천시 스마트 GIS인천 : <http://imap.incheon.go.kr/>
* 경기도 부동산 포털 : <http://gris.gg.go.kr/>

□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(Prop Tech)*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

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,

* ‘부동산(Property)’과 ‘기술(Technology)’의 결합용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형태

-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,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
- 정부 -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 정책과 문영훈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